

국제협력 정부 R&D 현황 및 과제

조하영* · 이상현**

I. 서론

연구개발 활동의 비용과 위험부담을 분산시키고 글로벌 표준의 장악을 위해 미국, 영국, EU 등 주요 선진국 및 다국적 기업은 R&D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R&D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술분업 및 협력을 병행하는 기술개발을 진행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R&D 국제화를 통한 대외 지향적 경제구조와 자원의 부족이라는 특성과 과학 기술역량의 한계 극복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R&D 국제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국제협력 활동과 그에 대한 지원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자간/다자간 협력 프로그램은 투자 대비 네트워크 형성 효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하고, 이를 도모하는 정부 R&D 사업은 공통적으로 구체적인 운영체제 및 로드맵 구축이 미흡하거나 부재한 실정이다. 이 중에서도 ODA 관련 내역은 투자비중이 높을 뿐 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R&D 국제화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R&D 국제협력 동향 및 투자현황 파악 등을 통해 우리나라 R&D 국제협력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쟁점사항 및 과제를 도출하여 관련 R&D 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과 향후 국제협력 관련 정부 R&D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II. 국내·외 국제협력 동향

1. 우리나라 국제협력

OECD 자료[11]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R&D 국제협력 부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대상 국가는 제한적이며, 기업들의 국제협력 비중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9년에는 2008년 75개국에서 11개국 감소한 총 64개국과 협력을 수행하였으며, 미국(33.9%, 761건), 일본(15.0%, 337건), 중국(7.1%, 159건)이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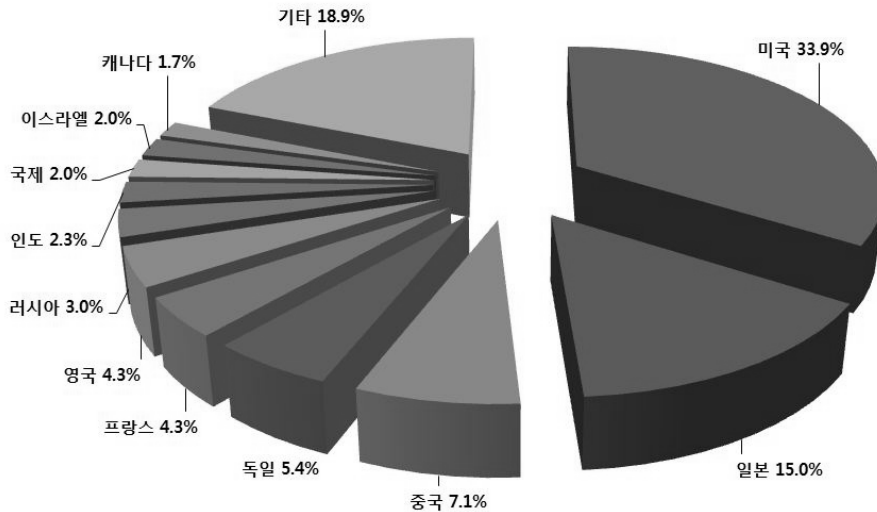
상위 10개국과의 2009년 협력추이를 살펴보면 상위 3개국의 비중은 2008년 51.1%에서 2009년 56%로 증가하고 기타 국가들의 비중은 2008년 23.4%에서 2009년 18.9%로 감소하여 협력대상국가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확대 지원되어야 할 다자간 공동연구를 의미하는 ‘국제’는 2.0%(45건)로, 전년도 2.6%(59건) 대비 오히려 감소하였다.(표 1)[1]

또, 신흥잠재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TVT, NEXT11, VISTA 국가 중 13개국(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방글라데시, 베트남, 아르헨티나, 이란, 이집트, 인도네시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필리핀)과의 협력 비중은 2008년 4.8%(108건)에서 2009년 2.9%(66건)로 전년 대비 38.8%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협력 비중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조하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원, 02-589-2963, assie@kistep.re.kr

** 이상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실장/부연구위원, 02-589-6972, shlee@kistep.re.kr

외국인과 공동 출원된 특허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EU 국가와 주로 국제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EU국가와의 국제공동연구 비중은 타 국가와 비교하면 저조한 편이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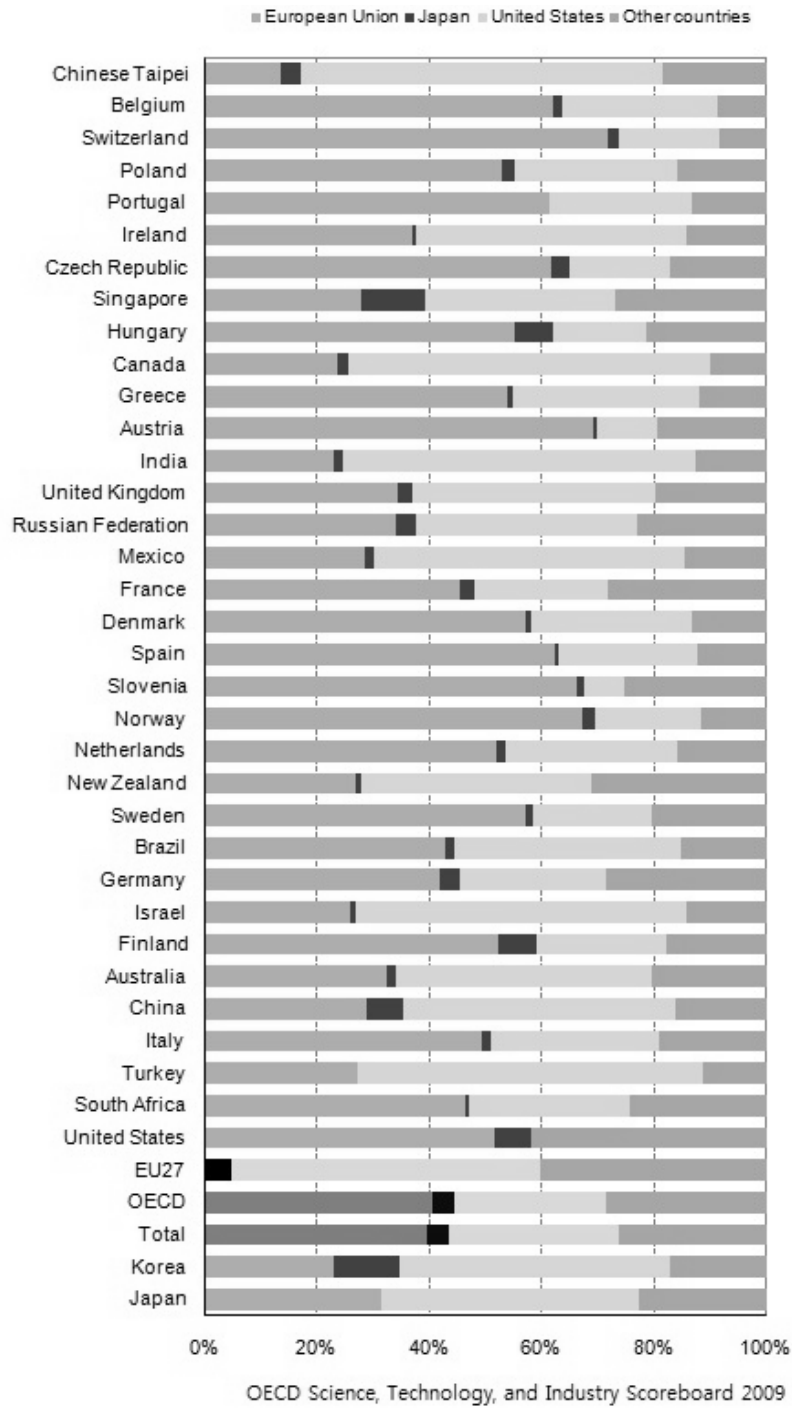
출처 : 국제협력 분야 국가연구개발의 투자 및 성과분석, 2011

(그림 1. 협력국가별 협력 현황, 2009)

<표 1. 상위 10개국 협력 추이>

국가	2007		국가	2008		국가	2009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미국	738	30.8	미국	737	32.8	미국	761	33.9
일본	311	13.0	일본	282	12.5	일본	337	15.0
중국	171	7.1	중국	130	5.8	중국	159	7.1
인도	134	5.6	독일	120	5.3	독일	121	5.4
독일	118	4.9	영국	103	4.6	프랑스	97	4.3
프랑스	105	4.4	프랑스	99	4.4	영국	96	4.3
영국	95	4.0	국제	59	2.6	러시아	67	3.0
러시아	82	3.4	캐나다	58	2.6	인도	52	2.3
캐나다	71	3.0	러시아	45	2.0	국제	45	2.0
국제	40	1.7	호주	45	2.0	이스라엘	45	2.0
이스라엘	38	1.6	이스라엘	43	1.9	캐나다	38	1.7
기타			기타			기타		
56개국	497	20.7	64개국	527	23.4	53개국	424	18.9
합계	2,400	100.0	합계	2,248	100.0	합계	2,242	100.0

출처 : 국제협력 분야 국가연구개발의 투자 및 성과분석,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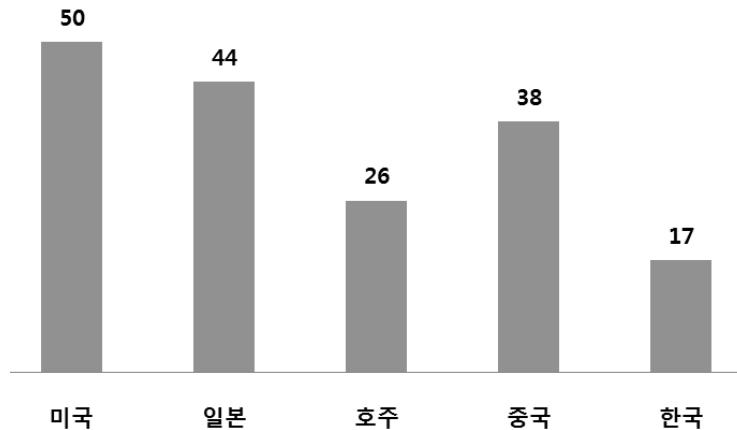


출처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09

(그림 2. 3개 주요 지역 협력파트너와의 국제공동특허, 2009)

EU FP(Framework Program)에 우리나라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자통신연구원(ETRI), 서울대학교, 삼성전자 등이 5차(7개), 6차(17개), 7차(2개) FP에 총 36개 과제에 참여하였고, 6차 FP에는 기술선진국으로 분류되어있는 미국(50개), 호주(26개), 일본(44개), 그리고 개발도상국인 중국(38개)에 비해서도 저조한 참여율을 나타냈다. (그림 3)

국가별 EU FP(6차) 과제 참여 수



출처 :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체계 비교분석, 2008

(그림 3. 국가별 EU FP(6차) 과제 참여 수)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정부 R&D 사업을 통해 발생한 논문이 정부 R&D 사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1%, 2008년 11.6%, 2009년 12%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논문의 질 또한 정부연구개발에 비해 월등히 높아 투자대비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R&D 국제협력 확대지원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위상과 기술수준을 감안할 때, 그리고 국제협력 분야 R&D의 연구 성과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제협력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므로, 연구개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통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우위선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술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적극적 정책을 제시하고 예산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2. 해외 국제협력 추진 사례

1) 이스라엘

2008년 기준 GDP 대비 R&D 투자 비중 4.66%로 세계 1위 국가인 이스라엘은, 양자간 혹은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연구개발의 리스크 감소와 비용 감축의 이점을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우수한 자체 과학 기술력과 전 세계에 퍼져있는 유대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활발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EU FP에 비유럽 국가로서는 최초로 참여하여 유럽과의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 하였으며 미국, 독일, 캐나다, 싱가포르 등 국가와 연구재단 및 기금을 설립 운영 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외국파트너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체결한 미국, EU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을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의 연결고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스라엘은 왕성한 국제협력을 통해 국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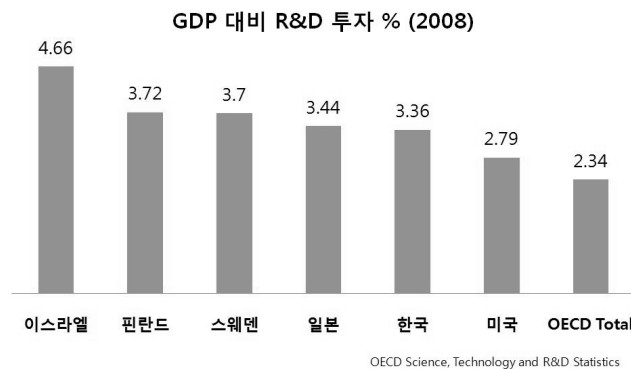
2) 핀란드

2008년 기준 GDP 대비 R&D 투자비중 3.72%로 세계 2위 국가인 핀란드는 공동연구, 위탁연구, 기술이전, 공동마케팅 등 정부R&D의 50% 이상을 국제공동연구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핀란드는 중소기업의 국제협력 비율이 약 22%로 가장 높아 기업의 R&D 국제화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 핀란드의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핀란드는 COST(European Cooperation in Scientific and Technical Research), EAS(European Space Agency), EU FP, EUREKA 등 유럽 국가들과의 다자간 협력사업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들과 공동 R&D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 국가들과의 다자간 협력사업을 통한 기업 국제공동연구의 지원으로 R&D 강소국으로의 입지를 확보한 핀란드의 사례는 다자간 국제협력의 효율성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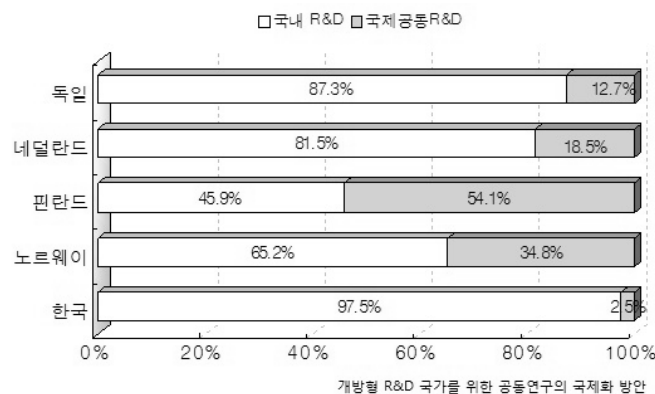
3. 국내·외 투자 현황

2008년 기준 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3.36%로 타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지만 국제협력관련 R&D 비율 2.5%는 핀란드의 1/20, 독일의 1/5, 그리고 일본의 1/4 수준에 불과하다.(그림 4) 핀란드는 Technology Programme 예산 4.91억불 중 2.65억불인 54%, 독일교육연구부는 R&D 예산 107억불 중 13억불인 13%, 노르웨이는 7억불 중 2.5억불인 35%를, 일본경제산업성의 R&D 예산 16억불 중 1억5천만불인 9.8%를 국제공동 R&D에 배정하여 우리나라가 가장 뒤쳐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만 고려하였을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과제 수 대비 국제공동연구 비중이 2008년 2.9%에서 2009년 2.6%로 감소하였다. [1]



출처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R&D Statistics online DB

(그림 4. 총 R&D 예산 중 국제공동 R&D 비율, 2008)



출처 : 개방형 R&D 국가를 위한 공동연구의 국제화 방안, 2005

(그림 5. GDP 대비 R&D 투자 비율, 2005)

III. 국제협력 관련 정부 R&D 투자 현황

<표 2. 국제협력 관련 정부 R&D 사업 예시>

(백만원)

부처	사업명	세부내역	2011년 예산
교과부	글로벌연구역량강화	글로벌연구실 해외생물소재 확보 및 활용 - 해외거점별 공동연구센터 운영 및 개소 - 해외생물소재 다양성 확보 및 국내 생물소재 허브센터 운영	21,770
		해외협력기반조성 국가 간 협력기반 조성 - 양자/다자간 국제협력 - 개도국 과학기술지원 등 해외 과학기술자원 활용 - 다자간 과학기술 공동프로그램(EU FP) 참여 - 해외 대형과학기술시설 자원 활용 등	
지경부	산업기술국제협력	국제공동기술개발 - 글로벌상용기술개발 - 양자/다자 국제공동기술개발 등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 - 해외기술협력거점구축·운영 - 해외기술협력네트워크구축	51,200
국토부	국제공동연구	국제기구 및 기관 간 협력 - 국제해양과학협력기반구축 등 국제협력연구 - 개발도상국 해사안전시스템 구축 협력사업 등	1,750

1. 교육과학기술부

1)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교과부 사업인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사업은 핵심 기초 및 원천기술의 확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생산성 제고, 그리고 차세대 국가 핵심 전략사업인 BT 산업의 기초원자재인 생물소재의 국제적 확보를 목적으로 198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2011년 예산은 217.7억원으로, 이 중 30억원이 해외 생물소재 확보 및 확충을 위한 중국권역, 중남미권역, 동남아권역 해외거점 공동연구센터 운영 및 개소비 등 다양한 지역과의 협력 및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집행되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는 우리나라 국제협력 R&D 추진현황의 문제점 중 하나인 협력국가의 집중현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10년 기재부 전문가팀의 검토 결과,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 중장기 계획의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보다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해외협력기반 조성

교과부 사업인 해외 협력기반 조성 사업은 양자·다자간 국제회의 및 외교채널을 통해 합의한 국제 과학기술협력의 효율적 지원 및 EU FP와 같은 다자간 과학기술 공동프로그램, 그리고 해외대형 과학기술 시설 활용 등을 통한 국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협력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199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2011년 예산은 199.42억원으로, 이 중 약 75%가 개도국 과학기술지원, 아프리카, 인도, 러시아 등 다양한 지역과의 협력 등을 통한 국가 간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배정되었고, 나머지 약 25%는 J-PARC, CERN 등 해외 대형 연구시설 협력 및 EU FP 협력 등을 통한 해외 과학기술 자원 활용을 위해 배정되었다. 특히, 이 사업은 대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 등 국가와의 ODA 지원 확대 및 페루, 튀니지, 브라질 등 신규 국가들과의 과학기술협력을 위해 연평균 7.9%의 중기예산 반영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본 사업의 세부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40억이 ODA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나라 R&D 국제협력에서 ODA의 중요성과 확대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국과위 전문위원회의 의견에도 'OECD 개발협력위원회 가입에 따른 개도국과 ODA 사업의 전략적 협력확대를 위한 예산 대폭 증액 필요'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뒷받침 한다. 의견 중에는 이 사업 역시 종합적 로드맵이 부재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체계적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본 사업의 특이사항은 교과부가 이 사업을 통해 EU FP의 기초기반 과제를 관리하고 있는데, EU FP 참여 지원은 지경부와 공동 추진되는 사항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3절에서 설명한다.

2. 지식경제부

1) 산업기술 국제협력

지경부 사업인 산업기술 국제협력 사업은 국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자체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1990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2011년 예산은 512억원으로, 약 90%가 양자·다자 국제 공동기술개발 및 글로벌 상용기술개발 등을 포함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을 위해 배정되었고, 나머지 약 10%는 해외기술협력거점 구축·운영 및 해외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을 위해 배정되었다. EUREKA, EU FP 등 다자 공동기술개발 프로그램에 국내기업 참여 활동비, 기술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다자국제공동기술개발에 60억원이 배정 되어 총 사업예산 중 다자간 국제공동기술개발 예산 비중은 교과부의 해외협력기반조성 사업에 비해 적으나 절대적 금액은 20억원이 더 높은 액수이다. 이는 지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EU FP의 산업기술 관련 과제의 수요가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3절에서 설명한다.

2010년 국회 상임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 여러 기관의 근접지역 진출보다 잠재시장으로의 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 사업 역시 구체적 중장기 기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국토해양부

1) 국제공동연구

국토부 사업인 국제공동연구사업은 해양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해양자원의 지속적 확보 및 국제 해양과학기술 협력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2011년 예산은 17.5억원으로, 국제 해양과학 협력기반 구축, 중국 및 중남미와의 협력, 그리고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등의 지원을 위해 집행되었다. 우리나라 R&D 국제협력의 발전을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다양한 지역과의

협력 및 진출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므로, 2010년 자체상위평가 시 지적된 바와 같이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갖는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IV. 국제협력 관련 정부 R&D 사업 이슈

1. 다자간 국제협력의 중점적 지원

우리나라는 기술수준에 비해 R&D 국제협력 부문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국제협력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투자 대비 네트워크 구축 효과가 뛰어나 이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다자간 국제공동연구는 오히려 다른 형태의 국제협력에 비해 활동이 저조한 상황이며 2008년에도 미미했던 2.6%의 협력 비중이 2009년에 2.0%까지 감소하여 중점적 지원이 필요하다.

위의 관련 사업 사례에서 언급한 EU FP는 모든 주제에 대해 다자간협력을 추진하며, 국제연구기구 참여를 통해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특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교과부와 지경부가 각각 해외협력기반조성사업과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가 주된 역할을 맡아 과제 공고를 두 부처에서 공동으로 내고 예산은 부처별로 각자 배분 받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기반 과제는 교과부가, 산업기술 관련 과제는 지경부가 관리하고 있다. 주된 역할은 교과부에서 맡고 있지만 수요는 지경부 담당인 산업기술 관련 과제가 더 많은 실정이다.

2. 협력대상국가의 다양화

국가별 협력추이를 살펴본 결과 미국, 일본, 중국의 상위 3개국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6%에 육박하는 반면, 기타 국가들의 협력 비중은 2008년 23.4%에서 2009년 18.9%로 감소하였다, 특히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신흥잠재국과의 협력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협력 비중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차 글로벌화가 진행되어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증대 될 것이라는 점과, 현재 개발도상국 또는 신흥잠재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를 고려하면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가들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진출 방향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3. 운영체계 개선

관련 사업 사례로 소개된 사업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분야의 정부 R&D 사업의 상당수는 공통적으로 체계적 운영 체제 및 로드맵의 미흡 또는 부재가 지적되었다. 국제협력 정부 R&D 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 수립이 필수적인데 이와 같이 중요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구체적 계획 마련 및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4. ODA 방향 재정립

1) ODA 필요성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어 가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가 생존기반으로서 수출시장 및

자원을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의 구분이 어렵게 되었으며, 한 국가의 문제는 전 세계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어 개도국의 안정 없이는 선진국의 안정도 보장받지 못한다. 또, 개도국의 경제 발전은 선진국에도 기회로 작용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 이외에도 우리나라에 있어 ODA가 중요시 여겨져야 할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 선진국의 개발원조 수원국으로 약 100억불 이상의 대외원조를 받아 오늘날 우리나라의 번영을 이루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 원조자금을 동력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 8억만불의 대외원조를 기록하며 이제 세계규모 12위 안에 드는 경제부국이 되었으니 한때 받은 기여에 대해 보답해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감도 존재한다. [9]

또한, 주요 선진국의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전략적, 다각적 지원이 필요한데, ODA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하였을 때 ODA 지원의 확대는 필수적인 사항임에 틀림없으며, 그에 앞서 방향성 및 전략의 확립 또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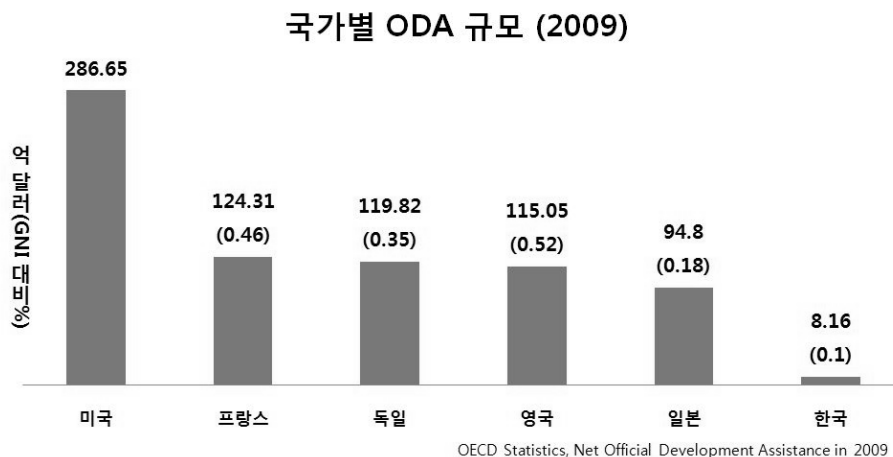
2) 국내 ODA 지원 현황

현재 국내 무상원조 사업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과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집트 외 20개국, 중동 지역에서는 이라크, 쿠웨이트 등, 동유럽 지역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남미에서는 브라질 등의 국가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7)

우리나라의 OECD DAC 가입에 따라 개도국과의 ODA사업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의 지속적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 ODA 규모를 살펴보면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GNI 대비 0.1%인 8.16억불로 많은 OECD 대표 국가들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며, 많게는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국가의 경제력과 위상에 비해 턱없이 미비한 실정이다.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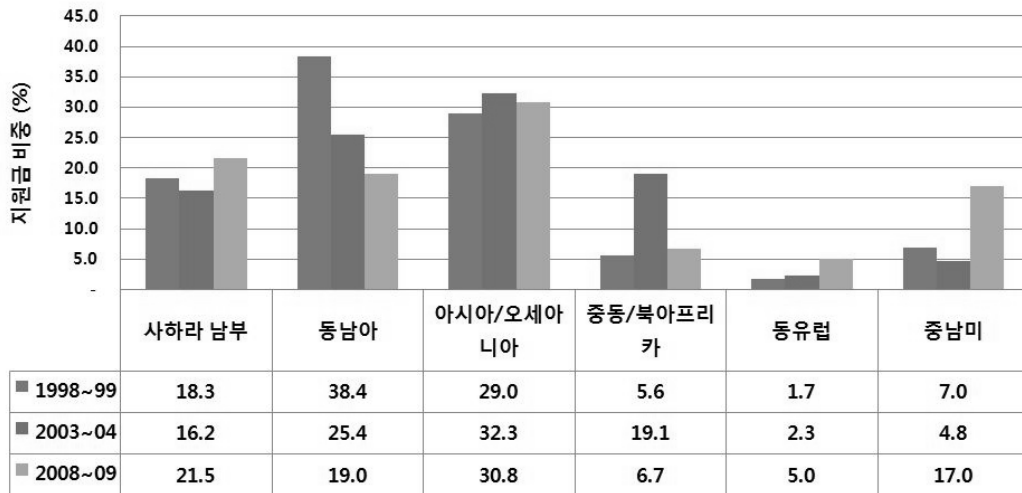
정부는 “최근 우리나라가 OECD DAC 가입과 G20 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격에 걸맞는 외교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ODA 규모를 GNI 대비 0.25%인 총 867억원으로 확대 하고, 개도국의 수요와 발전단계에 따라 맞춤형 개발협력 모델을 발굴, 지원하고 유·무상 원조기관과 협의해 현지 적정기술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OECD Statistics, Ne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2009

(그림 6. 국가별 ODA 규모, 2009)

지역별 ODA 비중



OECD, Regional Distribution of ODA by Individual DAC Donors

출처 : OECD Regional Distribution of ODA by Individual DAC Donors

(그림 7. 지역별 ODA 비중)

3) 일본 사례

현재 한국의 ODA는 대체로 일본 ODA의 모델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일본의 ODA 정책과 운영방식은 역사적으로 일본의 외교 전략에 따른 현실주의적 특색이 짙은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1953년부터 ODA 외교를 전개해 왔는데, 일본은 패전 후 아시아 지역 국가에 대한 배상금 차원으로의 지원이 주를 이루었고, 원조 수원국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 공여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현지의 일본 기업이나 일본 기업을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자국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나감과 동시에 경제성도 보장될 수 있도록 ODA를 수행해왔다.

이러한 일본의 ODA 특성으로 인해, OD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를 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ODA를 수행하고 있는 독일이 수월하게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반면, 일본은 국제사회로부터의 인정을 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9]

4) 쟁점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ODA는 단순히 수행여부, 규모, 혹은 국가의 경제적 이익 등의 사항으로 성공을 말할 수 없다. 향후 한국의 ODA 사업을 일본과 같이 외교정책 목표를 실현하고 국가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것인지, 혹은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ODA를 단순한 원조가 아닌 장기적 차원의 경제적 투자로 볼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예정대로 2015년 ODA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기 전에 ODA 사업 추진 방향의 확립을 위한 고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향후 과제

우리나라는 국가 기술력과 위상에 비해 국제협력 비중이 낮고 협력대상국가의 범위도 제한적으로 국제협력 부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국제협력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다자간 국제 공동연구는 투자 대비 네트워크 형성 효과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매우 저조해 EU FP와 EUREKA 등 국제 연구기구 참여 지원과 협력국가의 다양성 확보의 필요성이 보인다.

EU FP 참여 지원은 교과부와 지경부가 공동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된 역할은 교과부에서 맡고 있지만 수요는 지경부 담당인 산업기술 관련 과제가 더 많은 실정이므로, 보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예산 확대뿐만 아니라, 추진방안 재검토를 고려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본 논문에서 소개한 관련 사업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제협력 정부 R&D 사업은 공통적으로 구체적 운영체제 및 로드맵의 미흡 또는 부재가 지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국제협력 분야의 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 것과 국제협력 부문 사업의 가이드라인과 전체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것이 그 이유 중 일부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협력 정부 R&D 사업의 보다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산 규모의 전폭적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한국의 ODA 사업에는 주로 일본 모델이 반영되어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익에 기초한 현실주의적 특성이 강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글로벌화가 가속되어가는 시점에서 ODA를 단순히 국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 투자로 봐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ODA를 수행할 수 있도록, ODA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기 전에 방향성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1), “국제협력 분야 국가연구개발의 투자 및 성과분석”.
- 이정재 외(2011), “R&D 국제화 실태조사 방안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2010), “2011년도 과학기술 국제화사업 시행계획”.
- 오동훈 외(2009),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분석과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이길우 외(2009), “국가연구개발사업 해외 주체 참여 활성화 방안”, 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8), “R&D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 임경희(2008), “국제 공동 연구개발 지원 체계 비교 분석”, 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
- 산업자원부(2005), “개방형 R&D국가를 위한 공동연구의 국제화 방안”.
- 장준호 외(2005), “국제개발협력의 두 가지 모델 비교연구: 독일과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 오세정 외(2002), “과학기술 글로벌화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09.
- OECD Statistics online DB.